

해진공, 중소해운업계에 친환경 선박설비 실증 결과 공유

연료절감설비, 풍력보조추진장치
해상실증 결과 공유 세미나 열어
쇄빙선·내빙선 투자 프로그램 마련

해운업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선박 설비가 주목받고 있다. 연료절감설비·풍력보조추진장치 등이 그것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이에 대한 실증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기술 등을 중소업체와 공유한다.

해진공은 이달 30일 부산 중구 한국해사협력센터에서 연료절감설비(ESD) 및 풍력보조추진장치(WAPS)의 해상 실증 결과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연다.

이 자리에선 선사와 조선소, 선박 기자재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제 선박에서 친환경 설비를 적용한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선사의 친환경 설비 도입에 필요한 정보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단순한 소개가 아니다. 공사 관계자는 “선박 운항을 통해 확인한 성능과 검증 결과를 공유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풍력보조추진장치를 탑재한 HMM의 5만 톤급 중형유조선 ‘오리엔탈아쿠아마린호’. /해진공

최근 국제 해운업계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선박기술 도입이 늘고 있다. 선박 운항 과정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줄여주는 연료절감설비가 대표적이다. 또 바람의 힘을 이용해 선박의 추진력을 보조하는 풍력보조추진장치도 관심을 모은다.

중소선사의 경우, 새로운 설비의 실제 연료 절감 효과와 경제성을 사전에 확인

하기 어렵다. 게다가 자체적으로 실증에 투자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기술 도입에 대한 부담을 토로한다.

이에 공사는 세미나에서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선사가 설비 도입 여부를 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실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세션에서 ▲ESD 해상실증 연구사례 ▲WAPS 해상실증 결과 ▲WAPS

의 현재 기술수준 ▲성능 추정 가이드라인 ▲ESD 3자 검증결과 등이 다뤄진다. 서대식 HMM 책임매니저, 김연식 MOL 코리아 전무, 김상엽 한국선급 책임, 성경현 SB선보 이사, 나무 EnR 김태선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선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친환경 선박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검증된 실증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다”라 “이번 세미나가 해운업계가 친환경 설비의 성능과 적용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고, 실질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쇄빙선·내빙선 투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북극항로의 상업항로화를 지원하고 국제선사의 극지 운항선대 구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북극항로는 기존 항로에 비해 운항거리가 짧아 물류비와 운항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해상운송 경로로 주목받는다. 다만 극지방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쇄빙·내빙 기능을 갖춘 선박이 필수적이다. 일반 선박보다 도입 비용이 높은 데다 상업항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수

익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 선박 확보 부담을 줄이고 북극항로 운항에 필요한 선대(船隊)의 선제적 확보를 돕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는 국제선사가 북극항로 운항을 목적으로 새로 건조하거나 중고로 도입하는 쇄빙·내빙등급 선박 등이 대상이다.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 자동차운반선 등 선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양한 형태의 극지 운항 선박 확보를 지원한다.

해진공은 프로그램을 연간 1200억 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선가를 기준으로 후순위 금융에 최대 30%까지 투자한다. 이에 따라 선사는 선순위 금융을 포함해 선가의 최대 9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후순위 금융은 선순위 금융보다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만큼, 해진공의 투자를 통해 선사의 선박 확보에 필요한 금융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조정지역 2주택, 특례 받으려면 2년째 팔아야

재정부,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
2주택 특례기간 3년 → 2년 단축
내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집을 보유한 채 새 집을 사들여 한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매각해야 한다. 특례 적용을 위한 처분 기한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 적용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원칙적으로 내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합리화한다는 취지에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1년 줄이기로 했다.

양도세는 지난달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부세는 지난달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내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난달 3일까지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에는 종료 시점을 설정한다. 현재는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 과세 배제가 계속 적용

된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임대·단기 매입임대 아파트에 한해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기존 특례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비아파트와 조정대상지역 밖의 아파트, 건설임대·공공지원 임대주택은 기존 특례를 유지한다.

내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주택은 등록말소일로부터 1년까지 특례를 인정한다. 중과 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현행대로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유지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내한 중인 우간다 농촌진흥청·지방정부 공무원 대표단.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우간다에 K-농업기술 전수

우간다 농진청·지방정부 공무원에
‘농산물 안전·품질관리 역량’ 연수

한국농어촌공사가 우간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과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은 농산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둔다.

29일 공사에 따르면 우간다 농촌진흥청·지방정부 공무원 18명이 이달 하순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10월 10일까지 한국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서울시농수산물공공시장 등을 방문한다. 농산물 안전·품

질관리 현장을 살펴보고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우간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정이다.

올해는 농약 안전관리와 병해충 조사, 수출입 검역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올바른 농약 사용 방법과 안전 사용 기준 ▲식물 병해충 방제 기술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출 식품검역 실무 등을 교육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에서는 병해충 동정·예찰과 역학조사 등 실제 검역 절차 및 관련 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폭염·집중호우에도 전력공급 안정적

한전, 집중 특별 점검으로 대응

한국전력(한전)이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설비 점검과 정비로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전국 평균 기온은 25.4℃로 평년보다 1.7℃ 높아 역대 세 번째로 높았으며, 8월 중하순에는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에 한전은 지난 5월 15일부터 5주간 총 9741명을 투입해 송전설비 4110개, 변전·전차제어 설비 2966개, 배전설비 73만 개 등 총 74만 개의 전력설비를 집중 특별 점검했다.

송·변전 분야에서는 산사태 우려 철탑

1586기와 침수·누수 우려 변전소 538곳의 배수설비를 점검했으며, 열화상·부분방전 진단 등 과학화 장비를 활용해 이상장후를 보인 282건의 부적합 사항을 즉시 조치했다.

배전 분야에서도 여름철 전력사용 증가에 대비해 변압기·저압설비 14만 개 중 부적합 설비 2만 개를 정비하고,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해 전력선 접촉 우려 수목 51만 그루를 정비했다. 지중 저압설비 16만 개를 점검해 3000개를 보강하는 등 기상 상황별 취약 요인을 사전 제거했다.

아울러 한전은 정전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위해 송·변전과 배전 간 통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원거리 선로 및 무인변전소에 복구 인력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는



과학화 장비(부분방전 진단장비)를 이용해 가스절연 개폐장치를 진단하는 모습. /한전

등 현장 대응 역량을 끌어올렸다.

한전 관계자는 “선제적인 설비 점검과 현장 대응으로 올여름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상재해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AI안경 등 국가자격시험 부정 응시 단속”

산업인력공단, 부정행위 대응 모의훈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스마트안경 등을 지참해 국가자격시험을 치르는 등의 부정응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단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29일 울산 국가자격시험장에서 ‘AI 활용 첨단기기 사용 부정행위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서는 실제 국가자격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는 등 부정행위 상황을 모의로 설정했다.

시험위원 교육을 비롯해 시험 전 수험자 안내 및 소지품 전수조사, 시험 중 전파탐지기를 활용한 현장 점검 등 단계별

대응 절차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공단은 AI 기반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체계 고도화 TF(전담반)’를 꾸렸다. TF는 관련 법령·규정 정비와 시험위원 교육, 상황별 대응절차 강화, 전파탐지기 도입, CCTV 설치 확대,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부정행위 예방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0월 15일까지 ‘AI 활용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